

국가인권위 위원장 부적격자 날치기 임명, 이해 못할 수락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자격 검증을 위해 묻습니다.

현병철 씨는 인권 문외한이라는 인권단체들과 법학교수모임 등 인권시민사회의 비판과 여러 언론이 제기한 학자로서의 논문표절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성급하게 검증절차 무시하고 내정한 임명권자의 잘못이 먼저이지만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자리를 수락한 현병철 씨도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적·제도적 검증절차가 미비한 현실이기에 인권단체들은 당신이 스스로 자격있음을 증명하길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래 질문은 인권인식과 감수성의 기본이라 할 것과 국가인권위의 장이라면 당면하게 될 문제 중에서 뽑은 것입니다.

■ [참고 1]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장 자격 가이드라인

- ①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
- ②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
- ③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
- ④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개선 의지
- ⑤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
- ⑥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⑦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
- ⑧ 도덕적 청렴

■ [참고 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장의 자격

- ①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
- ②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 경험
- ③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의지(인권지향성)

1. 인권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한 초등학교에서 현병철 씨에게 특강을 요청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몇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

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동부장관이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되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병철 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YTN 노조위원장 등 언론인 구속과 관련해, 지난 4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친 탄압병(Mad bullying disease) : 공격받는 언론 자유’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역시 YTN 노조원 구속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병철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병철 씨는 민법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여러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특별한 수임으로 안고 있는 차별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기구 관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무엇입니까?” 현병철 씨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6. 반년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진실을 알 권리’와 사법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검찰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덧붙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병철 씨가 재직한 한양대학교도 인권현장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강사들, 청소 노동자, 재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학내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요.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면 본인이 추측하는 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한국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제성호씨가 현 정권의 인권대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현병철 씨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높은 철탑이나 굴뚝 위에서 위태롭게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장애인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농성을 풀도록 만들기 위해 경비원들이 식량이나 물,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일도 잦고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자들을 끌어내는 일들도 잦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0. 아래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이 벌어지는 동네에서 흔한 일입니다. 다음 사례에 등장한 세입자 동수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재개발 시 세입자에게 최소한 마련돼야 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동수는 할머니와 초등학교 2학년 동생과 함께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수의 어머니는 동수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해 전 직장에서 해고된 뒤 전국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끔씩 생활비를 부쳐주시지만 그걸로는 세 식구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할머니가 근처 시장 노점에서 국수를 팔아서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동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개발을 한다면서 집주인이 이달 말까까지 방을 비어달라고 합니다. 시장도 철거된다고 하고요. 동수네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현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독립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트집잡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는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와 소속 없는 국가기구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2.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1% 조직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직 축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괜찮은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반인권적인 건물승강기 정지 및 화재비상구 폐쇄에 대해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난 7월 17일 청와대는 기습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고 국가인권위는 같은 날 취임식을 강행하고자 했다. 위원장 취임식은 조직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받는 자리여야 하겠지만, 불행히도 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은 축하받지 못했다.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졸속적인 임명과 취임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찾아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인권활동가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승강기를 정지시키고 화재비상구를 폐쇄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과 사무총장에게 분명히 묻고 싶다. 인권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날치기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데, 이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항의를 봉쇄해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인권활동가들의 입을 틀어막은 채 국가인권위가 위원장 취임식을 강행하는 것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한 일인가?

무리하게라도 취임식을 강행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행정 상 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의 행동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가 겉치레 위원장 취임식 따위를 방어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의 입을 틀어막고 이를 정당화한다면,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탄압하는 국가 권력을 향해 국가인권위는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고 권고 결정의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인권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전진해왔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둘러싼 싸움의 역사적 성과로서의 결과이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의 과정에 있다. 국가인권위가 불의한 권력에 대해 독립적으로 비판의 칼날을 베풀어주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면, 인권을 둘러싼 싸움의 결과이자 과정으로서의 국가인권위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죽음. 그것은 국가인권위라는 조직이 해체되는 순간이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가치를 잃고 더 이상 인권의 파수꾼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일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활동가들